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2015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2015.1.23.

국토교통부는 민간 부문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로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규제총점관리제를 금년 내에 40% 감축하고,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여전히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에 구축한다.

또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한다.

이외에도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2015 환경부 업무계획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15.1.22.

환경부는 지난 1월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세대까지 환경복지를 온전히 누리는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된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환경 불편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무상방문수거, 단독주택 분리 배출, 폐수 찌꺼기, 어린이 활동공간, 학교 실내환경, 층간소음, 지진경보)를 확대 시행하며, 저비용 · 고효율 환경관리(환경인 · 허가제도 선진화,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 국토 · 환경계획 연동제 가동)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실화(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제품 생산·유통·소비를 확대)하고, 생태계 보호 및 폐자원·에너지의 순환이용을 통한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여 환경과 기업이 모두 웃는 환경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한옥 공공건축 지원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5.1.23.

국토교통부는 서울 노원구 한옥어린이집 등 모두 5개 사업을 '2015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옥의 높은 건축비를 감안하여 마련된 '한옥 공공건축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해당 한옥공공건축물의 주민 생활복지 기여도, 파급효과 및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전남 강진군 '다산 한옥생활관 조성사업', 전남 영암군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한옥문화시설 건립', 충남 금산군 '아토피자연치유 한옥마을 조성', 서울 노원구 '국공립 한옥어린이집 건립' 등 5개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최초로 우리 고유의 한옥으로 짓는 노원구의 국공립 한옥어린이집은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증대는 물론 한옥 보유 시설 확산의 선도 모델이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토피 치유의 전국적 메카로 알려진 금산 아토피자연치유 한옥마을의 경우 마을의 건축물을 친환경 녹색건축인 한옥으로 건립해 한옥의 자연치유 효과를 보다 널리 전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향후에는 한옥마을사업 등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였다.

생활자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민 참여, 주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국정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 맞이 첫 마을' 대성동 공동체 프로젝트 진행, '마을기업', '마을공방', '골목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등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읍·면·동제' 지정 및 지방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복수직급제도 도입, 직무분석을 통한 역량평가 실시)한다.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으로 통합적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하고, SNS와 언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갈등 사전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허가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다.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데이터 분석센터(BEMS) 개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5.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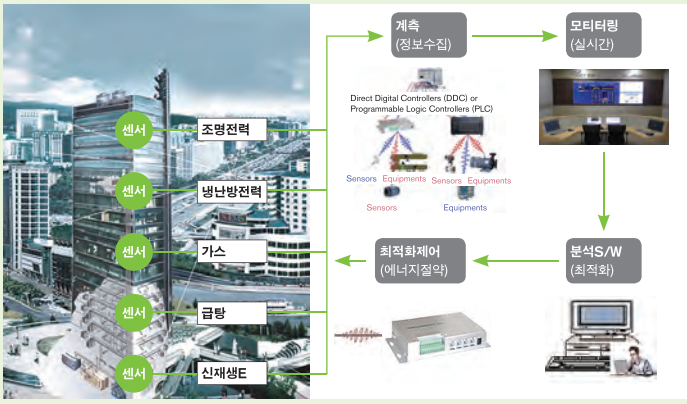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설치 건물의 에너지 및 운영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BEMS 에너지 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BEMS 에너지 데이터 분석센터'는 BEMS 설치건물의 에너지절감 분석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200㎡ 규모로 구축되었으며, 전담 전문가가 상주한다.

분석센터는 BEMS가 설치된 10개 건물**의 에너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개별 건물별로 에너지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물에 대한 BEMS 관리대행 등 새로운 ICT 사업 모델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센터 개설로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BEMS 데이터 분석을 국산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국내 건물 에너지관리 분야의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BEMS 설치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국토교통부 BEMS 설치 시범사업 5개소(한국디자인진흥원, KT 선릉타워, BC카드, 영남대, 신라대) 및 세종시 통합운영센터 연결 5개 공공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5.2.12.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5.1.23.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생 사고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유사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과 안전점검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주민 교육 등 실제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 발표

서울시는 자치구, 소방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1월 14일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에 걸쳐 1,181동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층 필로티 화재 안전성 강화(갑종 방화문, 천장을 내단열 또는 비가연성 단열재로 시공 등),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공사 중 건축물은 설계변경을 통해 화재예방시설을 적용하며, 불연마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유도한다. 기존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열·연기 감지기 설치 등을 유도하고,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저리 융자로 알선한다.

부산시 건축주택과
2015.1.15.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2014.1.21.

경상남도 안전총괄과
2015.2.23.

부산시, 건축물 외부마감재 사용 방안 마련

부산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외부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은 적극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기존 건축물(준공된 건축물)은 외벽 마감자재 교체 시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인천소방안전본부는 1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소방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보·피난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입주민 대피훈련계획, 건물 간 이격거리 및 외벽재료 파악, 필로티 주차장 설치 및 방화구획 여부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와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수조사 자료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상별 화재진압대책에 사용키로 하였다. 또 소화전·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권고하는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더불어 좁은 도로 등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진입로 일방통행 지정, 소방차 통행로 황색문자 노면 표시와 주·정차 금지 구획선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펼쳤다.

경상남도, 긴급 안전점검 실시로 제도개선방안 도출

경상남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도 내 도시형 생활주택 1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여 점검 결과 경량칸막이 기능상실 2건, 대피공간 관리부실 등 9건, 세대 내 실 추가 및 증축 10건, 소방시설 유지·관리부실 17건 등 모두 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였다.

이에 도는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7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제도개선사항은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5층 이상 건축물 외벽에 비가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기준 강화 3건(협소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대지 내 건축물 간 인동거리, 주차장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피난기구 안전기준 보완 등 7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5.1.15.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6일 서울세관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제주도를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제주 읍성과 제주관아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노후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제주특별자치도 간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부문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적인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도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에 힘쓰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수립한다.

이후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와 사업시행자 간 선도형 제로 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세부이행 협약도 체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협약을 통해 68조 원 규모인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다움이 깃든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자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2015.02.09.

강원도 총무행정관
2015.1.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1.22.

부산시 도시재생과
2015.1.22.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마을의 현안을 발굴토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사업공모 지원을 통해 주민조직화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핵심 시책으로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마을활동가를 비롯한 6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정책연구포럼이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의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거쳐 완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특히 마을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연구자·의회·행정이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협의해 나온 결과물로, 시민이 정책을 직접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혁신 모델이기도 하다.

광주 마을공동체 목표는 더불어 사는 광주정신을 시민의 일상과 삶터인 마을에서 실천하는 데 두고,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을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해 해결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

먼저 '주민주도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태동을 지원하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각 마을의 주민조직 역량에 맞춰 '씨앗기-확장기-안정기'의 단계별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주민들이 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복지마을과 도시재생형 마을공동체 주택건설 시범사업,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사업 등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42억여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중심 '마을학교' 운영,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체계로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칭) 설치, 마을의 성장을 도울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및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부서 간 칸막이 없는 마을정책 추진을 위한 '마을정책 조정회의' 운영 등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2014년 1월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래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육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와 **부산시**도 매년 다양한 마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마을 공동체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실시

부산시 주택건축과
2015.2.24.

부산시는 지역 최초로 민선 6기 부산건축정책 방향인 ‘시민의 건축, 품격 있는 부산’의 도시비전 실현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위촉하여 도시·건축 정책 자문 및 공공건축 등에 참여시키는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을 갖춘 우수 건축가를 발굴해 공공건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젊은 건축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민선 6기 부산건축정책 방향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기존 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사업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우수 건축가 활용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2년에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요 건축정책 사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및 설계 참여 등을 통해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해외에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프랑스 ‘엘리트 공공건축가 제도’는 모든 건축과정에 있어 공공건축가에게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대표적 사례로 드골공항과 TGV(테제베)역사를 들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신진 건축가, 디자인 우수, 사업별 총괄건축가이며, 시가 정하는 공공건축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3월 중에 부산시 홈페이지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차에 걸쳐 서류심사와 면접 등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6월께 20~30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며, 하반기에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 디자인개선 사업, 산복도로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건축문화도시 조성 및 공공건축 기반강화 추진 업무 등 민선 6기 부산건축정책 추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 및 자문 등을 하게 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진 건축가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시가 지원하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부산시 공공건축가”란 건축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부산다운 도시건축 공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부산시장이 위촉한 자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운영

인천시 도시경관과
2015.2.6.

인천광역시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구도심 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서민 주택들에 대해 집수리와 마을환경 정비 등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하자보수나 각종 정보 제공과 택배 보관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은 관리사무소가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은 소소한 수리마저 미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 등을 ‘마을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주택 관리소’를 설치해 서민들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관할 구청에서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주택 관리소에서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를 지원하고, ‘쓰레기 집 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를 도와준다. 또 공동체 모임 구성과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외에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5개소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각 구청을 상대로 공모를 추진하여 점차 일반 구역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와 군·구에 마을주택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건축물 관리의 기본업무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마을주택 관리소의 운영 초기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유휴 전문인력과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자원봉사자로 등록받아 운영하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자랑스러운 지역 업체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마을가꾸기 문화를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별·분기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